

# 한·미 FTA협상 그 실체와 대응과제

‘한·미 FTA’ DDA협상과 격·의미 달라, 농업희생 발판 성장전략 구사  
지적기반 근거 논리적 비판·농업 지키기 위해 국민 지혜 결집해야

**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자유무역을 촉구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만들었다. 그 이후 약 40년 만에 자유무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시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키면서 드디어 농업도 본격적인 개방의 대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개방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경제는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아 또 다른 성장전략을 찾기에 안간힘을 써야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한국 농업은 역사상 가장 힘든 시련기를 맞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려고 협상을 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개방의 소굴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 농업개방 각오한 위험한 성장전략 게임

쌀 재협상이란 충격의 와중에서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도했다. 불과 9개월 전에 쌀 재협상 국회 청문회를 했고 그 비준도 몇 번에 걸친 무산 과정을 거친 후에 힘겹게 국회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시간에 쫓기게 되었고 결국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까지 2006년도에 함께 수입하게 됨으로써 올 한 해 동안에만 2년간의 쌀 수입량을 한꺼번에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강도 높은 농업개방을 해야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에 한국 농업의 자발적 개방을 선언한 셈이다. 2004년도 쌀 재협상이 UR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농업개방이고 WTO/DDA

농업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개방경제 체제 유지에 불가피한 행위였다면 한·미 FTA는 세계 최강의 농업국에 농업개방을 각오하고 자원해서 하는 우리 정부의 선택사항이라 할 것이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모든 선택에는 지불해야 하는 마땅한 비용이 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어야만 그 선택은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참여정부의 한·미 FTA 선택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 지구상의 선진국치고 그 어떤 나라도 농업을 희생시켜서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하려는 행위는 금기시하고 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자국의 농업개방 능력에 맞게 점진적인 개방을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DDA)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현재 진행 중인 FTA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WTO 회원국 중에서 농업개방을 가장 강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선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의도하는 한·미 FTA 협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농업계와 일부 정치권의 매우 강한 저항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 해답이 보인다. 한·미FTA 협상은 바로 농업개방도 불사하는 행정부의 위험한 성장전략 게임으로 본다.

## 대통령의 의지(?)

먼저 이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까지 이에 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내용만을 보면 아직도 산·관·정·학이 가슴을 열고 논의할 장을 만든다면 농업개방을 유보시킬 희망이 없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 16일 대통령은 이번 한·미FTA에 임하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한편 또 하나의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요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은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농민의 아들로서.....최선을 다해 농업부문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등등.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이해단체의 저항은 개의치 않겠다. 둘째, 국익을 해치는 협상이면 결렬되어야 한다. 셋째, 협상 조건 중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넷째, 농업부문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비록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상 4가지 내용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단체들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안전장치인 농업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은 한·미FTA협상의 올바른 진로와 시시비비를 가릴 준비를 위해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지금까



김 충 실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단체들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안전장치인 농업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은 한·미 FTA협상의 올바른 진로와 시시비비를 가릴 준비를 위해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교훈이 있다. 그것은 세 규함에 의한 뜨거운 가슴의 물리적 대책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이성적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교훈이 있다. 그것은 세 규함에 의한 뜨거운 가슴의 물리적 대책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이성적 대책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 필요조건(?)

시도해야 할 우선과제는 본 협정의 필요조건부터 검토하는 일이다. 합리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합친 순무역창출 효과가 큰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해야 한다.

둘째, 농업과 같은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 즉 식량안보 및 다원적 기능이 큰 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당사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두 나라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제규모가 커야 한다.

넷째, 두 나라간 교통거리가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이 협상당사국에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상의 조건 중에서 둘째 조건과 다섯째 조건이 문제시된다. 특히 둘째 조건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탄생 이후 반세기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강조되어 왔다. 지금도 선진국은 물론이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농업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국제무역 확대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곡물금지조치를 통해 식량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세계



최강의 농업국인 미국조차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보호 장벽을 만들거나 개방예외 품목으로 규정하여 왔다.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면화 보조금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했던 것을 1996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 농민을 보호하려고 멕시코산 수출 토마토에 최저가격제를 다시 관철시키기도 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윈·윈 협정이 되려면 적어도 민감 품목은 DDA수준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 한·미 양국 정부의 현주소(?)

이미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실익을 분석·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특히, 한국이 최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가시화하자 미국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검증을 재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국에 비해 그 준비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농업을 포함한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내용이 미국측 분석 결과에 비해 우리 농업부문 피해를 과소평가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서비스부문의 이익을 지나치게 낙관시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발표한 영향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중요한 논리적 한계와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분석경험에 따르면 시장조건, 자본형성 및 투자조건, 농업 및 농산물 수급 특성 등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사실을 반

영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요컨대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겠다는 우리정부의 열정에 비해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과 같은 기초산업에 대한 통상정책 철학이 우려된다.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농업부문에 대한 특단의 전제조건 없이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과 농민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협상 대안과 국내 대책 없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하려 든다면 국익에 엄청난 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입장을 왜곡 없이 반영한 철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와 농업을 동시에 고려한 한국적 대안개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국가의 변동적 안정 상태를 유지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가시대를 맞아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하겠다는 정부의 열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한·미 FTA 협상이 더 진전되기 전에 단순히 거시경제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산업별 업종별 미시정책 목표와 수단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확고해야 협상범위와 전략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견제하는 이해단체 또는 정치권도 단면적 비판보다 세계적 수준의 지적기반에 근거한 보다 논리적 비판을 요한다. Y